

에너지 안보의 동학과 일본 원자사태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에너지 안보는 국제관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 안보의 국제 관계는 에너지 공급안보와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 더하여 에너지의 전략적 가치, 세력변화(전이), 동맹관계의 변화, 테러와의 전쟁, 군사기지의 재편성, 영토문제의 갈등적인 측면과 갈등적 측면을 평화적 수단을 통해 협상으로 해결하려는 국제협력의 측면을 모두 다루려는 노력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영토갈등과 해상수송로 안전을 도모하려는 해군력 경쟁, 러시아 자원 개발의 주도권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정책을 대중국 에너지 봉쇄로 분석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총성 없는 에너지 확보전쟁은 일본 원전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인 확보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은 재정적자로 인해 중국에 대한 대응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미일동맹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고조될 수 있으며,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일의 에너지 확보경쟁을 갈등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과 갈등이 동전의 양면인 것과 같이 중·강국의 소프트 파워를 최대화하여 강대국 간 갈등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 차

1. 개요
 - 가. 문제제기
 - 나. 국제관계 측면에서 본 에너지 안보
2. 동북아 에너지 안보와 갈등과 협력
3. 일본 원전사태의 에너지 안보적 의미
 - 가. 일본 에너지 관련 피해 현황과 안보적 의미
 - 나. 에너지 안보의 국제관계를 통해 본 일본 사태
4. 결론: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

1. 개요

가. 문제제기

1) 에너지의 전략적 특징: 갈등과 협력의 중추적 고리(critical node)

19세기가 자원개발 경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자원확보 경쟁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음. 자원 중에서 에너지는 다양한 특징으로 인해 국제갈등을 고조시키거나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 갈등과 협력의 중추적 고리로서 에너지는 아래와 같은 전략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매장 분포의 불균형

- 소수 국가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어 공급자 간의 협력이 용이한 반면,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함으로 소비자 간의 경쟁과 갈등이 발생함.
- 소수의 생산자는 에너지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타국에게 자국의 의사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로 불리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
- 에너지 소비자 연합에 비해 생산자 연합의 결속이 용이하고 강한 반면, 에너지 부존지역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분쟁이 진행중이거나 분쟁이 잠재해 있는 지역으로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고 진행되고 있는 지역임. 이로 인해 생산자 간 이해갈등도 발생하여 에너지 국제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 비탄력적 경제재

- 에너지 자원은 무한재가 아님. 채굴이 매장량의 한계에 이르면 고갈의 위험성이 존재함. 따라서 에너지 보유국은 가능한 충분한 생산기간과 매장량 그리고 높은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고갈 가능성으로 인해 생산국과 소비국 간 그리고 생산국 상호 간에 첨예한 이익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공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해 협력이 요구됨.
- 현재 에너지 자원으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성과 기술의 미발달로 인해 재생에너지로의 대체가 당분간 불가능한 상태임.

○ 상대적 이익에 민감

-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서는 협력보다는 경쟁과 갈등의 요소가 부각

됨. 이는 상대적 이익 즉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가?’에 집중적으로 나타남. 이는 에너지가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에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임.

- 에너지 자원의 판매에서도 빈번하지는 않지만 상대적 이익에 민감한 현상이 발생함.

○ 복합안보의 특징을 내포

- 에너지가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복합안보의 관점이 요구됨. 특히 에너지 생산지역과 수송통로를 확보할 경우 신흥 성장국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흥 성장국들의 판매권 협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에너지 확보경쟁은 패권경쟁과도 연관성을 가지며 패권 경쟁국 간 노골적인 갈등과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갈등이 에너지 분야에 그치지 않고 다른 분야, 즉 핵, 미사일, 마약, 테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2) 기존 에너지 안보 연구의 경향

○ 에너지 경제안보(energy economic security)¹⁾

- 에너지 경제안보는 합리적 가격에서의 공급 안정을 목표로 함. 가격 변동이나 물량부족의 충격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 향상에 집중할 연구임.
- 가격등락의 위험(price-risk)에 집중. 생산자 동맹인 석유수출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등장 이후, 소비자 동맹인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와 전략비축물량의 확보는 가격등락의 위험을 줄이려는 수단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전략비축물량의 조절을 통해 소비국들은 석유 가격의 안정을 확보하려함.

○ 에너지 공급안보(energy-supply security)²⁾

- 제2차 오일쇼크 이후, 가격과는 상관없이 에너지 확보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등장함. 물량위험(volume-risk)은 시장가격을 지불할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연구함.
- 석유파동(Oil Peak) 개념이 재조명되면서 발생함.³⁾ 매장량의 감소와 글로벌 수요의 증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에너지가 경제안보와
군사안보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복합안보의
관점이 요구됨.
특히 에너지 생산지역과
수송 통로를 확보할
경우 신흥 성장국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흥 성장국들의
판매권 협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에너지 안보의 국제 관계는 기존 공급 안보와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 더하여 에너지 자원과 국제 안보의 중요 이슈들 즉, 에너지의 전략적 가치, 국제세력변화, 동맹의 변화, 테러와의 전쟁, 군사 기지의 변화 및 영토 분쟁, 국제협력 등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룸

- 생산국의 보호를 통한 생산 물량의 확보와 더불어 생산 물량의 안정된 수송에도 관심을 가져 해양수송로(SLOC: Sea Line of Communication)의 보호와 파이프라인의 보호에 관련된 국제역학에 대해서도 연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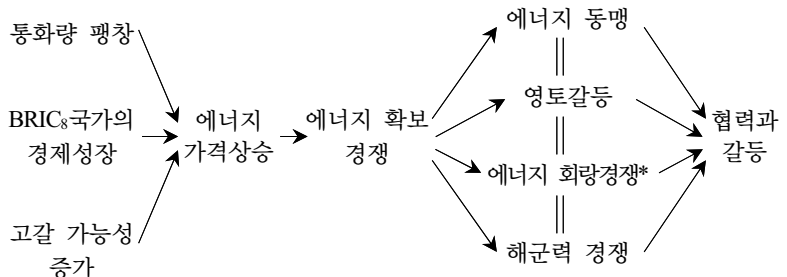
- 에너지의 안보화(energy for security)의 관점⁴⁾
 -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국가 간의 분쟁 또는 긴장 완화의 요인으로서 에너지 역할 증대 및 국가 방위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함.
 - 공급의 다변화, 수송로 다변화에 집중하여 에너지원의 다변화, 공급지의 다변화, 수송라인은 분쟁지역과 국경 경유를 최소화, 국제 현물 스왑(swap)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
- 에너지의 국제정치경제학(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of Energy)⁵⁾
 -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은 국제통화의 팽창, 특히 미국 달러화의 팽창과 에너지 가격변화에 대해 연구함.
 - 투기자본의 에너지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에너지 가격 변화의 국제통화적 관점을 제시함.

나. 국제관계 측면에서 본 에너지 안보

1) 에너지 안보의 국제관계

- 기존 공급안보와 국제정치·경제적 관점에 더하여 에너지 자원과 국제안보의 중요 이슈들 즉, 에너지의 전략적 가치, 국제세력변화, 동맹의 변화, 테러와의 전쟁, 군사기지의 변화 및 영토 분쟁, 국제협력 등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룸.⁶⁾ 이를 통해 복합안보로서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함.

〈그림 1〉 에너지 안보의 국제관계



* 파이프라인 유지와 해양수송로 안전확보 경쟁

- 석유자원의 고갈 가능성(Oil Peak Theory) 이후 중요성과 적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에너지 중심으로 개편되는 탈냉전 이후의 국제관계를 갈등과 협력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음.

2) 에너지 가격 급등의 정치경제학적 원인들

- 국제통화, 특히 미국 달러화의 팽창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
-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의 에너지 수요 및 소비의 증가.
- 기존 유전의 고갈로 인한 생산량 하락으로 국제사회에 부정적 파생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생산량의 하락으로 석유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비전통유전인 캐나다와 베네수엘라의 오일샌드(Oil Sand)의 관심이 높아지게 됨. 오일샌드는 높은 생산단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음.
- 투기자본의 활동.
- 에너지 확보 경쟁의 격화.
- 9·11 테러 이후 해양수송로, 파이프라인, 송유펌프장, 정유소, LNG 터미널, 송전소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비용의 증가.

3) 에너지 안보와 동맹의 변화

- 지정학적 동맹에서 경제 중심적 에너지 국가동맹의 등장.
- 미군의 재배치를 통한 동유럽, 카스피 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로 미군의 활동영역 확대로 국제 동맹관계가 변화하고 있음.
- 패권국 미국은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미국은 잠재적 위협으로 중국의 부상, 테러리즘, 생산자 카르텔에 의한 세계 경제의 혼란을 지목하고 있음. 유라시아에서 벌어지는 현 상황은 테러전쟁과 에너지전쟁의 복합게임으로 볼 수 있음.

4) 에너지 안보와 중국봉쇄

- 중국의 에너지 정책
 - 중국 경제성장의 아킬레스건. 산유국이지만, 석유 소비의 증가와 유전의 노후화로 1993년 이후 석유 순 수입국이 된 이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2031년경 중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가 미국 수준으로 접근한다면, 현재 생산되는 모든 석유를 중국 단독으로 소비하더라도 부족한 수준. 따라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에너지원의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음.

기존 유전의 고갈로 인한 생산량 하락으로 국제사회에 부정적 파생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미군의 재배치를 통한 동유럽, 카스피 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로 미군의 활동영역 확대로 국제 동맹관계가 변화하고 있음

**에너지와 관련된
사안에서 중국은 미국과
치열한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음. 중국은
이란 핵개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 산유국인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의 대 중국 봉쇄
 - 에너지 수급 중심으로 봉쇄가 진행되고 있음.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중국의 에너지 해양수송을 거부할 능력이 증가되고 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군사 및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어 중국의 에너지공급과 육로를 통한 공급을 거부할 수도 있는 능력이 강화되고 있음.
- 중국의 에너지 확보 전략
 - 기존 에너지 시장을 통한 수급보다는 하류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자원의 선점과 지분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중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중동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거나 약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국경에 인접한 지역에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에너지와 관련된 사안에서 미국과 치열한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음. 중국은 이란 핵개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하이 협력 기구를 통해 산유국인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와의 협력 증진을 통해 해군 기지를 마련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해양수송로에 대한 패권적 지위에 대항할 수 있는 기초적 수단을 마련함.

5) 에너지 안보와 테러리즘

- 에너지 안보와 테러리즘은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 에너지 수입의 일부는 테러집단의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고,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포를 확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됨.
- 에너지 개발이 테러집단을 양성하기도 함.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나이저 델타 지역에서의 석유 시추는 토착민의 어업과 농업을 황폐화 시킴으로써 이들이 테러집단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함.

6) 에너지 안보와 영토갈등의 역동성

- 에너지 부존 지역의 영토갈등이 새로이 부각됨.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기존 경제성이 없었던 지역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에너지 부존 지역의 개발권과 주권을 두고 관련국의 영토갈등이 부상하고 있음. 남중국해 갈등은 대표적인 사례임. 남중국해 영토갈등은 에너지 확보 경쟁이며, 냉전 이후 협력과 갈등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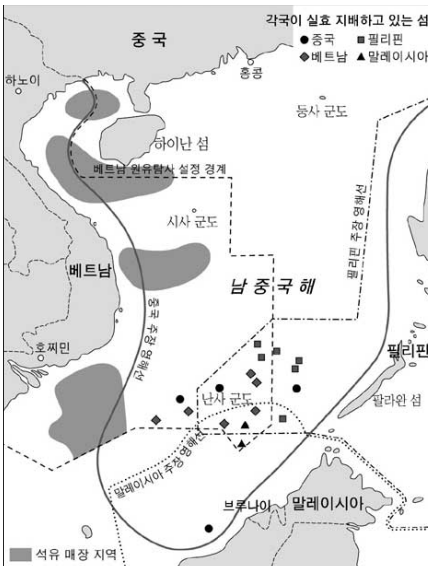
- 에너지 부존 지역의 내전이 격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에너지 자원은 보유국에게 축복과 저주의 산물(mixed blessing)로 나타남. 에너지 개발권과 수입의 분배를 두고 종족 간, 지역 간 갈등이 증폭되고, 강대국의 이해관계도 개입되어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제개입의 확대 및 심화가 진행되고 있음.

7) 에너지 안보와 해군력 경쟁과 협력

- 에너지 안보는 해군력의 증강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해양수송로(SLOC)의 보호와 해양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자국의 해군력을 증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북아에서는 군비경쟁이 해군력 경쟁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에너지 안보는 국가 해군력 경쟁뿐만 아니라 해군력 협력도 추동하고 있음. 특히 해적들의 빈번한 등장으로 인해 해양수송로를 보호하려는 국제적 공동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해군 협력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

2. 동북아 에너지 안보와 갈등과 협력

〈그림 2〉 동아시아 에너지 자원과 영토분쟁



출처: 구글 이미지, 2009111301390_0



출처: 연합뉴스 2004년 6월 8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기존 경제성이 없었던 지역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에너지 부존 지역의 개발권과 주권을 두고 관련국의 영토갈등이 부상하고 있음. 남중국해 갈등은 대표적인 사례임. 남중국해 영토갈등은 에너지 확보 경쟁이며, 냉전 이후 협력과 갈등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임

동중국해 영토는 중국과 일본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며, 한국도 '이어도' 영토 설정에 따라 중요한 이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지역

1) 에너지 안보와 영토갈등

○ 남중국해 영토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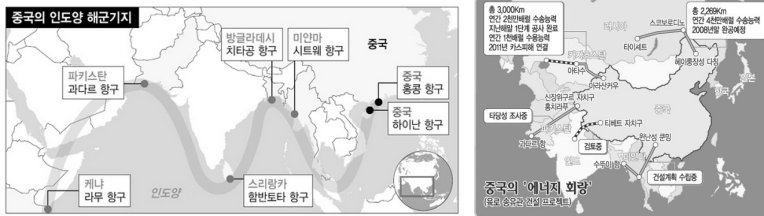
- 서사군도(파라셀 군도)와 남사군도(스프레틀리 군도)는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루나이의 주권 주장이 혼재하는 곳임. 현재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자국민을 거주시키거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음.
- 자원의 보고: 남중국해 에너지 자원으로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표적임. 정확한 추정은 불가능하지만, 원유의 경우 최대 280배럴부터 2,130억 배럴까지 매장량이 추정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경우 약 900조 입방피트에서 750조 입방피트 정도가 남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됨.⁷⁾
- 중요한 해상 수송로: 세계 초대형 유조선(supertanker)의 절반이 넘는 수가 이 지역을 통과하며, 전 세계 상업적 해운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을 지나감. 세계 원유 수송의 66%가 통과함. 한국과 일본의 원유 수송의 99% 중국 원유 수송의 83%가 통과. 연간 50,000대 이상의 배가 지나가며 수에즈 운하의 세 배, 파나마 운하의 두 배 이상의 교통량임. 전 세계 무역의 1/4에 해당함.⁸⁾ '항해의 자유'가 제안될 경우 한·중·일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 안보의 요충지: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 아시아 군사력 투사에 대응하고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완충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패권 성장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역.
- 당사국 간 다양한 분쟁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었으나 2002년 행동규약이 발표된 이후 분쟁의 빈도는 단기간에 축소됨. 그러나 2004년 이후 분쟁이 재발하여 최근(2011년 6월) 중국과 베트남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함.

○ 동중국해 영토분쟁⁹⁾

- 중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며, 한국도 '이어도' 영토설정에 따라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지역.
- 석유와 천연가스의 매장 잠재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아시아의 페르시아만 걸프'로 인정되고 있음. 2009년 현재 경제성이 있는 석유 매장량만 40억 톤으로 추정되고 있음.
- 해상수송로의 요충지: 페르시아 만, 인도양, 몰라카 해협, 동중국해, 일본열도 및 한반도로 연결되는 해상수송 거점지역.
- 안보적 요충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기지이고, 일본의 대중국 진출 및 진출 역지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

- 빈번한 중일 간의 군사적 충돌. 2011년 7월 9일 양국의 항공기가 대치하는 상황도 발생함.

〈그림 3〉 중국의 에너지 소송 안보를 위한 정책



출처: 한겨레신문 2011년 6월 3일

출처: 헤럴드경제 2010년 7월 12일

2) 해양수송로 안전과 해군력 증강

-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싱가포르에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와는 군사훈련을 통해 군사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미7함대가 페르시아 만에서 동북아에 이르는 지역을 작전범위로 설정하고 있음.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국으로 연결되는 해양수송로(SLOC)가 미국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중국은 취약한 에너지 안보구조를 가지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전락석유비축 규모는 30일에 불과하며, 2020년까지 90일분의 수입물량인 8,500만 톤을 목표로 비축기지를 건설 중임. 일본의 161일분과 한국의 150일분에 비하면 취약성이 높은 수준임. 55%의 석유를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해상수송로가 우연적 혹은 의도적으로 봉쇄될 경우 치명적인 경제 손실을 감당해야 함.
- 해양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
 - 중국은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국, 파키스탄과 해군기지 사용을 위한 협정을 맺어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형태의 거점을 수립함. 또한 해양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력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음.
 - 해양수송로 봉쇄를 회피하기 위해, 파키스탄 과다르 항에서 신장-위그루에 이르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검토 중이고, 인도와 티베트 자치구를 연결하는 철도 및 미얀마 수두이 항에서, 남부를 거쳐 윈난성 쿤밍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건설 모색 중임.
 - 해군력 강화 노력: 중국은 미완성 항모 바리야그를 구입하여 자국의

중국은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국, 파키스탄과 해군기지 사용을 위한 협정을 맺어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형태의 거점을 수립함. 또한 해양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군력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음

일본의 경우, 전통적 해양국가의 특징을 살려 장거리 투사 능력의 증강, 잠수함 및 소해함대의 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음. 또한 중국의 분쟁지역 도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이 등장하기 시작함

항모로 개조 중이며 2015년 배치 예정, 항모를 호위할 신형 구축함, 프리깃, 원자력 잠수함 등을 함께 건조하고 있음.

- 잠수함 전력은 양안사태 발생 시 미국과 타국의 개입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임. 2009년 현재 6척의 핵잠수함과 56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음.¹⁰⁾
- 일본의 경우, 전통적 해양국가의 특징을 살려 장거리 투사 능력의 증강, 잠수함 및 소해함대의 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음.¹¹⁾
 - 일본 해상 자위대의 전력은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음.
 - 최근 발표된 일본의 ‘방위대강’에 의하면 기저에 깔린 일본의 위협으로 과거 소련이나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등장하고 있음. 또한 중국의 분쟁지역 도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이 등장하기 시작함.

〈그림 4〉 동북아 송유관과 가스관



출처: 동아일보 2008년 10월 30자에서 수정 출처: 투테이에너지 2009년 9월 29일자

3) 중 - 일 러시아 에너지 확보 경쟁

- 원유확보 경쟁에서는 중국이 최종적으로 승리
 - 러시아 원유공급 통로인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을 두고 2002년 12월부터 시작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은 2005년 7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푸틴 방문 이후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함.
 - 러-일 노선인 ‘앙가르스크-나훗카 노선’과 중-러 노선인 ‘앙가르스크-다칭 노선’이 치열하게 경쟁함.¹²⁾ 최종적으로 러-일 노선인 ‘앙가르스크-나훗카 노선’을 주 공급선으로 건설하되, 지선인 중-러 ‘스코보로디노-다칭 노선’을 먼저 건설하여 중국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결론.
 - 2010년 8월 29일, 스코보로디노-다칭의 지선 중 러-중 국경에 이르는 67km의 송유관이 완공됨. 다칭까지 나머지 930km 구간은 중국이

건설하여 2011년 1월부터 본격 가동 중. 중국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1,500만 톤의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게 되었다. 이 송유관의 최대 운송 능력은 연간 3천만 톤임.

- 주 공급선인 ‘앙가르스크-나훗카 노선’의 남은 부분 2,100km ‘스코보로디노-코즈미노 노선’은 2012년 완공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나,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물량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 2013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¹³⁾

○ 천연가스 확보 경쟁

- 천연가스는 석유에 비해 매장량이 풍부하고 분포가 불균등함. 천연가스 국제교역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대부분 물량과 수송선이자기 거래로 묶여 있음. 신규 진입과 긴급수급이 어려운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음. 난방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동고하저’의 패턴으로 인해 계절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은 저장하고 동절기 부족한 물량은 현물거래를 통해 충당함. 동북아에서는 공급과잉상태로 가격이 낮음.
-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생산량을 보유한 국가로, 천연가스 개발과 경제성장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 중임. 러시아의 문제는 생산된 가스를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파이프라인과 항만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임. 러시아는 과거 ‘특정 가스전→특정 수송관→특정 소비국’에 공급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통합가스배관망(UGSS : Unified Gas Supply System)을 구현하고자 노력 중임. 그러나 20년이라는 건설기간과 1,000억 달러라는 자금이 소요됨.
- UGSS는 4단계로 추진 중이며, 사할린 지역에서 개발을 시작하여 생산 중임. 사할린 프로젝트는 3개 공구로 구성되어 있음.¹⁴⁾ ‘사할린-1’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공급하고, ‘사할린-2’는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 한국 및 아태지역에 소비 중이며, 현재 ‘사할린-3’이 개발 진행 중에 있음.
- ‘사할린-2’와 ‘사할린-2’의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 중국과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함. 일본은 13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력전을 폈으나 천연가스 수출지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엑스모빌이 2006년 10월 21일 전량을 중국에 수출한다는 가계약을 중국과 체결함으로써 중국이 압승함. 그러나 2007년 8월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수요를 먼저 충족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사할린-1’의 생산 전량을 극동지역에 공급을 요구함. ‘사할린-2’의 생산량도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량과 생산량을 보유한 국가로, 천연가스 개발과 경제성장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 중임. 러시아의 문제는 생산된 가스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임

**일본 원전사태는 동북아
세력전이 발생하는
과정 및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국면에서
발생함**

중국보다는 다른 지역에 수출될 상황임.

- 파이프라인의 교체나 대체가 어려운 점이 고려되어 중국과 일본이 자국에 유리한 통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
- 중국은 2020년 300~350BCM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 주변국인 미얀마(10BCM), 중앙아시아(30~35BCM)로부터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80BCM을 공급받고, 자체 생산 능력 115BCM을 고려할 때 60BCM 정도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할 것으로 예상됨.¹⁵⁾
- 중국은 러시아의 톰스크에서 출발하여 노보쿠즈네츠크를 거쳐 중국 신장의 무르무치를 연결하는 가스관(알타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함. 빠르면 2015~2016년부터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30BCM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이 가능함.

3. 일본 원전사태의 에너지 안보적 의미

가. 일본 에너지 관련 피해 현황과 안보적 의미

1) 일본 원전사태의 시기적 의미

- 동북아 세력전이(power transition)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발생
 - 중국의 부상, G2개념의 등장으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됨.
 - 일본 경제의 상대적 쇠퇴. 일본의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로 인해 국가 정책의 방향이 제한되고 있음.
 - 미국 경제의 상대적 쇠퇴.
 -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재부상.

○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국면에서 발생

2) 일본 원전사태로 인한 에너지 피해 현황

- 전력시설 피해 현황
 - 지진으로 인해 운전 정지된 총 발전용량 33GW(3.14일 기준). 도쿄 전력 및 도호쿠전력 총 발전설비의 약 34%(일본 전체 발전설비의 12%) 피해. 도쿄전력과 도호쿠전력은 화력발전복구 및 가동률 증가를 통해 하절기까지 각각 5,380만kW(설비능력의 70%), 1,370만kW(설비능력의 65%)까지 공급능력 확보 가능.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 제1, 2원전(도쿄전력), 오나가와 원전(도호쿠전력), 도카이 원전 등 11기와 정기검사로 운행정지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의 4, 5, 6기

원전설비 피해, 가동중지 결정된 하마오카원전 총 15.8GW임. 화력 발전소 총 14.5GW와 수력발전소 8곳 총 2.4GW. 대체 발전에 따른 추가 연료 소비량 LNG 약 7.7백만 톤/년으로 추정.

○ LNG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력공급 안정성 및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한 원전확대 정책의 타격 불가피함.
- 후쿠시마 제1원전 폐쇄 및 원전 건설계획의 지연으로 LNG 대체발전 증가. 특히,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7~8호기, 히가시도리 1~2호기 건설계획 차질 예상(총 5.5GW). 이 경우 추가 연료소비량: LNG 3.8백만 톤/년. 한편 IEEJ는 2011년 추가 연료소비량을 6.2~8.6백만 톤/년으로 전망함.
- 지난 2년간 국제 LNG 현물가격은 안정적 수준 유지(열량 기준 원유 가격 대비 0.7~0.8 수준). 가격 안정의 원인으로는 경기침체, 미국의 천연가스(비전통가스) 공급 증가, 유연물량 증가 등이 있음. 2011~2013년, 기간 중 가격의 급속한 변동이나 물량 부족은 없을 것으로 평가됨.
- 중·장기적으로 일본 추가소요에 따른 잉여물량 소진으로 LNG 현물 가격의 점진적 상승 예상됨. 일부 원전폐기, 원전건설 지연으로 연간 700~800만 톤 장기도입 소요 발생함.

나. 에너지 안보의 국제관계를 통해 본 일본 사태

1) 일본 사태와 일본 정치의 변화

○ 일본 간나오토 내각 지지율 하락

- 2010년 12월 17일 지지통신의 여론 조사에서 이미 21%로 하락함.
- 2011년 4월 29일과 30일에 일본 교도통신사에 의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대응책에 대한 일본국민의 불만이 76%를 기록해 지난 3월 하순보다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의 재정 적자로 인한 대응 능력의 감소

- 일본은 2011년 재정적자가 3,7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 복구비용으로 1,230억 달러에서 2,350억 달러가 필요함.
- 일본의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일본 원전사태로 인해
간나오토 내각 지지율이
하락했고, 일본의 재정
적자로 인한 대응 능력의
감소로 인해 일본의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일본위기는 미일동맹의
의존이 심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동북아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함**

- 일본 대외정책의 ‘공세적’ 변화 가능성
 - 일본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음.
 - 자민당으로 정권변화가 일어나거나,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국민주의’, ‘민족주의’에 기초한 공격적인 대외정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
- 2) 일본 위기와 동맹변화의 역동성
 - 일본의 미일동맹 의존도 심화
 - 민주당 정권에서도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추세임.
 - 일본의 재정능력의 한계로 미일동맹의 심화를 통한 안보 상황 대처 가능성이 높음.
 - 일본과 러시아의 안보협력 개선
 - 동북아 에너지 공급국인 러시아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러시아 또한 연해주 및 사할린 지역 자원 개발을 위해 해외자본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 미일동맹의 강화는 대중국 포위에 경도될 가능성이 크므로 일본으로서는 러시아와 안보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에서 2개 이상의 가상의 적과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이 점에서 북방 영토에 대한 갈등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미일동맹의 심화가 러시아와의 안보협력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는 상황임.
 - 안보협력은 담보상태가 진행되더라도, 일본은 러·일 에너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음. 동시베리아 원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앙가르스크-나훗카 노선’의 남은 부분 2,100km ‘스코보로디노-코즈미노 노선’의 조기 완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천연가스의 장기적 확보를 위해 ‘사할린 프로젝트’에 자금과 기술을 통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동북아 에너지 시장이 공급자 시장이고, 러시아가 경제적 관점보다는 전략적 관점에서 에너지 개발을 추진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일본이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음.

- 일본과 중국의 안보상황 악화
 -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국방력 증가를 일본은 심각한 문제로 고려중임.
 - 미국과의 안보 협력의 심화뿐만 아니라 호주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증진을 통해 중국과의 천연자원의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노력할 가능성이 높음.
 - 아직 미완으로 끝난 동북아 원유 수송로와 가스 수송로에 대한 중국과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3) 일본 사태와 해양 영토갈등의 진행

- 일본의 해양 영토갈등 중,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분쟁과 한국과의 독도 영토 분쟁은 수면 아래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와는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한국과는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으로 인해 극단적인 대치는 자제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조어도 갈등은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에 밀리는 2등 국가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또 국민을 통합 시킬 외부위협 의 필요성에 의해 센카쿠/조어도 영토갈등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음.
 - 일본과 중국의 해상 및 공중 대치 및 충돌이 잦은 지역임.
 - 중국이 개발 중인 춘샤오 가스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양국 간 에너지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 높음.

4) 일본 사태와 해군력 증강

-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증강 속도는 유지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전반적 경제 규모가 중국에 뒤지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경우 일본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안보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음.
 - 대규모 침공에 대해서는 미일동맹에 의존하더라도, 소규모 충돌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군사력 증강이 필요함.
 -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해양국가의 특징과, 해로안보의 필요성, 미일 연합작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해군력 중심의 증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일본 해군력의 증강 방향
 - 전체적으로 미일연합작전에 호응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음.

러시아와는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한국과는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으로 인해 극단적인 대치는 자제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방비 증강 속도는 유지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 해군력의 증강 방향은 전체적으로 미일연합 작전에 호응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한 원해 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호주 및 아세안 국가와의 연합훈련 혹은 교류를 통해 대 중국 봉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음.
- 『2010 방위대강』은 기존 방어위주의 전략, 혹은 수동적 거부전략(denial strategy)에서 ‘동적 방위력’ 개념으로 바뀜. ‘동적 방위력’은 해상, 항공 자위대의 경계·감시 능력을 강화해 기동적으로 부대를 파견한다는 것임.
- 2010년 5월 미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에서 센카쿠 열도가 중국에 점령될 경우를 대비한 탈환 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이후 소규모 상륙 작전과 해병대 창설을 통한 적극적 방어와 투사능력 확보에 노력할 가능성이 있음.

4. 결론: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

1) 심화되는 동북아 에너지 갈등

- 탈냉전 이후 에너지와 관련된 국제관계의 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일본 사태는 동북아 에너지 안보의 갈등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중강국인 한국의 입장에서 갈등적 요소가 부각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세계적 차원에서 그리고 동북아 차원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관련 국제 갈등을 창조적 대안으로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2) 에너지 동맹 형성에 대한 대응 전략

- 한미 동맹의 발전적 방향 모색
 - 한미 동맹은 한반도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도 긴요함. 한국의 해양 수송로가 미7함대 작전지역에 포함되어 있음. 한국이 단독으로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인 자금이 소요됨. 한미동맹의 발전을 통해 상호 상생하는 방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형 개발협력모델에 기초한 발전 동맹의 모색
 - 에너지 부존 지역에 대한 적극적 외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자원이 풍족한 지역은 자원으로 인해 사회적 질서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음. 한국의 특성에 맞는 개발협력모델을 개발하여 공적개발기금(ODA)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빈곤 극복과 국민의 힘에 의한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한국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운 자원보유국과는 안전과 안보에 역점을 둔 협력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의 근본이치 안과 안보인 점에 고려하여 한국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한국형 개발 모델을 전수하는 방안을 모색함.

3) 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신에너지 개발 협력으로 전환

- 에너지원의 확보를 둘러싼 미중 간의 대결에서 흑백논리보다는 창조적 대안을 설정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공동 연구를 주도하여 미·중 간의 갈등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러시아의 천연가스 개발과 관련하여 동북아 소비자 카르텔을 주도하여 중·일 간의 경쟁을 협력의 장으로 유도함. 러시아 천연가스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소비자 카르텔에서 제공하고 장기 계약을 통해 합리적인 분배의 제도화를 추구함.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경쟁이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은 협력 촉진자로서 중·일 양국의 이해를 조정하여 동북아 천연가스 소비자 카르텔을 주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4) 영토갈등에 대한 객관적 원칙의 수립

- 에너지 부존 지역의 영토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 규범에 맞게 한국의 독도 및 이어도와 관련한 확고한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지역 영토 분쟁에 대한 태도를 확립함.

5) 해군력 강화 경쟁을 해군 협력으로 전환

- 동북아 군비통제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한·중·일의 해군력 증강과 작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
- 자연재해와 해상테러,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3개국의 협력 방안을 발전시켜, 상호 군사적 신뢰성을 고양시킴.

**탈냉전 이후 에너지와
관련된 국제관계의 변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일본 사태는
동북아 에너지 안보의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에 기초한
발전 동맹의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저자 약력

■ 박상현

現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 (University of Tennessee at Knoxvill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주요 경력으로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 연구분야는 국제협상과 국제협력에 전공했으며, 최근 비전통안보인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식량안보, 테러리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저서로는 『협상게임』을 비롯한 5권과 30편의 학술 논문 및 다수의 신문 기고가 있음.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주석

- 1) Jan H. Kalicki and David L. Goldwyn eds Energy and Security: Toward a New Foreign Policy Strategy(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5).
- 2) C. LaCasse and A. Plourde, "On the renewal of Concern for the Security of Supply," The Energy Journal vol.16, no.2, 1995; C. K. Ebinger The Critical Link: Energy and National Security in the 1980s(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Georgetown Univ. 1982); 허태희 · 윤영미, "석유고갈시대의 에너지위기와 안보: 가상 시나리오 분석" 『한국동북아 논총』 제51집, 2009.
- 3) 1956년 허버트(M. King Hubbert)에 의해 처음 제시한 가설, 즉 석유생산정점(Peak Oil)론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
- 4) 도현재, 『21세기 에너지안보의 재조명 및 강화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pp.35-39.
- 5)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Princeton Univ., 1987).
- 6) 김재두 · 심경옥, 『미국의 대 이라크 확전』(한국국방연구원, 2002); 김재두, "미래 에너지 분쟁 가능성과 한국의 안보 군사 대비 방향" 『전략연구』 제37호, 2006.
- 7) 1993/4년 미국의 지리조사는 석유 매장량을 280억 배럴이라고 주장하고 미국 에너지 정보기관(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입증된 석유 매장량이 단지 70억 배럴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다. 2005년에 로완(Rowan)은 "이 지역은 입증된 석유매장량은 70억 배럴 정도이고 하루에 250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외국 지리조사연구소(Russian Research Institute of Geology of Foreign Countries)의 1995년 보고서는 그 지역에 단지 60억 배럴 정도로 추정했다. 낙관적인 서구의 평가 중의 하나는 스프레틀리 지역 전체 천연가스 자원을 단지 35조Tcf(Ton Cubic Feet)로 보고 있다. 김석수, "남중국해 국제분쟁의 국제정치: 파라셀과 스프레틀리 군도를 중심으로" 2010년 12월 9일 제주평화연구원 심포지엄 발표 자료.
- 8) 이재현, "최근 남중국해 갈등 양상과 한국의 전략" IFAN FOCUS(2011년 6월 27일).
- 9) 손기섭, "중일 해양영토 분쟁", 진창수 편, 『동북아 영토분쟁과 일본의 외교정책』(세종연구소, 2008)과 하도형, "중국의 조어도 영토분쟁과 해결방식" 이동률 외, 『중국의 영토분쟁』(동북아역사재단, 2008).
- 10) 한국국방연구원, 『2010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한국국방연구원, 2011), p.213.
- 11) 박상현 · 조윤영,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과 동북아 해양 안보" 『21세기 정치학회』 제20집 2호, 2010년. 참조.
- 12) 이우신, "러시아 동시베리아 송유관 정책결정 요인에 관한 비판적 고찰" 『국가전략』 제11권 4호 2005, p.106; 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한스미디어, 2006), pp.120-121 참조.
- 13) 동아일보 2011년 1월 3일자 보도.
- 14) UGSS의 4단계 구축은 1단계(2007~2009) 사할린 지역의 가스관 건설, 2단계(2010~2012) 사할린 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의 구간 건설, 3단계(2013~2015) 아쿠티야센터(차안다 가스전)에서 하바로프스크까지의 구간 건설, 이르쿠츠크센터(코빅타 가스전)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까지의 구간 건설, 4단계(2016~2030) 이르쿠츠크센터에서 아쿠티야센터까지 구간 건설로 구성되어 있음.
- 15)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 공보자료.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치정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